

경찰, '직장 괴롭힘' 엄중 단속

규칙 개정안 의결...직장 괴롭힘 명문화 조직 전 구성원 대상 갑질 등 근절 나사 갑질신고센터서 구제...단속·수사 방침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도 조직 내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경찰청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 규칙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계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념 등이 담겼다.

경찰 구성원들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공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2020년부터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

으며,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개정 규칙은 경찰이 조직 내 비공무원 구성원들에게까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구제 관련 규정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넓힌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 현재까지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활동을 해오고 있다. 향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에 관한 문제 또한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일원화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갑질신고센터로 들어온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등 조치를 엄하게 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경찰은 상시적으로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경우 엄정하게 수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채용과 승진에 갑질 관련 인식을 반영하거나 갑질·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전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에 관해서는 징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내부 목소리를 묵인하거나 은폐, 축소 한 관서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내 직원 상호 간에 여러 형태의 괴롭힘 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에 대해 가능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서 갑질 관련 의식과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중·고교 탈의실 설치 한다

탈의실 설치교 65.2%...경남 99%, 경기·경북 53%뿐

앞으로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교실 한 쪽에 숨어 환복하는 불편이 일선 중·고교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학생용 탈의실을 설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현재 전국 중·고교 중 탈의시설을 갖춘 학교는 3710개교로 전체 학교의 65.2% 수준이다. 1980개교에는 탈의실이 없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99%, 세종 86%, 부산 81%, 강원 80%의 학교에 탈의실이 설치된 반면 경북과 경기도 지역 학교는 53%만 탈의실이 있어 지역 간 격차를 보였다. 대전(57%), 전남(57%), 서울(59%) 등도 탈의실 설치율이 60%를 밑돈 지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화장실이나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학생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래 간 어울리는 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탈의 시설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의 접근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탈의실 확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한다.

2020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실 항목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 전국 중·고교 탈의시설을 완비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공간 부족 등 물리적 한계로 탈의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다양한 유형의 탈의 시설도 제시할 계획이다.

유엔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경인교를 방문해 학교 탈의시설을 둘러본다. 경인교는 학교 내 탈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 여름방학 중 탈의실 확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경인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갖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여학생 건강간격력평가에서 저득점인 4~5등급 비율은 2016년 7.1%에서 2017년 7.8%, 2018년 8.7%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여학생 선호 종목의 지속적인 개발·보급과 여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목포 도심 야산 멧돼지 출몰...주의 당부

목포시 도심 인근 야산에 멧돼지가 출몰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7월에 접어들면서 개체수가 증가한 멧돼지들이 먹이 부족으로 대박산·양을산·지적산 인근 농지에 출몰하고 있다.

이들 야생 멧돼지들은 농작물 중 고구마 밭을 집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 출몰지역의 순찰을 강화해 지금까지 3마리를 포획했다.

하지만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양을산의 경우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확보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2인 1개조로 운영 중인 포획단을 2개조로 확대해 운영하고 등산객 안전을 위한 경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멧돼지 출몰지역의 경작자들은 작물 피해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야간에는 통행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만약 멧돼지를 만나게 되면 뛰거나 소리치지 말고 주위의 나무나 바위가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몸을 숨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개한 '나라꽃 무궁화' 제철절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교색동 수원 무궁화원에서 인부들이 활짝핀 무궁화를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내달부터 국내 체류 제한된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이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현행 제도는 건강보험을 선택 가입

하도록 해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만3060원)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난민 인정자나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납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이용 시

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차례 미납 시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이 허용되고 4차례 미납 시에는 체류 허가가 불허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편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체류 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 등인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되, 유예 기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런판결 저런판결

ID 빌려 아내 가석방 자료 열람한 법무부 공무원 벌금형 선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빌려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에 접속해 아내의 가석방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법무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49)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B씨의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에 60차례,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통합업무시스템과 연동된 시스템에 68차례에 걸쳐 접속해 거주구치소 신축 사업 관련 문서, 법무부의 가석방 관련 문서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문서만 제한적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B씨는 감사 업무와 관련해 일선 기관에서 등록한 문서 전반에 대해 폭넓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에 A씨는 "거창구치소 관련 국회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B씨가 이를 승낙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아내의 가석방 문제와 자신이 처리하던 거주구치소 신축 사업 관련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정당화한 점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 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태치로중, 자태치로 중인 민력군

국가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